

두달 공전 마침표... 국회 열린다



여야 5당 대표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기위해 함께 사랑채로 걸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한국당, 기존 입장서 양보 오늘 원내 수석부대표 일정 논의... 선거제 개혁안 등은 불씨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올해 들어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기로 양보하면서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손해원 의원 청문회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안 발표 없이 30여분만에 해산했다. 원내대표들은 '손해원 청문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3월 국회를 개최해야 할 때라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회동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결단을 내려서 3월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3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손해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나 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3월 국회를 통해 그간 미뤄던 시급한 민생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임시국회 개최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바로 3월 국회 소집공고를 낼 경우 사용된 오는 7일 개회식(본회의)을 열 수 있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마친 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5일 원내 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달 넘게 국회가 마비될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했던 점을 고려할 때 불씨가 커지면 언제든 다시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3월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법 등 다수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첫번째 난관은 선거법 패스트 트랙 지정이다. 현재 한국당 제외한 여야

당은 선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단일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당이 격렬히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4당이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강행할 경우 진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의원직을 넘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손해원 의원의 청문회 여부 역시 예민한 쟁점이다. 애초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인인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 차원 청문회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두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조사를 설치해 손 의원과 함께 같은 의혹을 받는 한국당 의원들도 동시에 조사하자는 주장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3당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민주·바른미래·정의당 "무관용 대응"... 한국당 "정부 탓"

정치권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혁 연기' 집단행동에 잇달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개혁연기 방침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유총을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의 잘못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며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은 절대로 관용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어린이들을 불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급진적 민노총이 경제파괴적 파업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며 "갈라치기를 위해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쪽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견디겠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 체제 '친박의 귀환'

대변인 민경욱·사무총장 한선교·부총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사무총장에 4선의 한선교(경기 용인시청)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당 대표를 맡았던 17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인연을 맺어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대표격인 '원박' (원조 친박계)으로 꼽힌다.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임할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춰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대변인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조선의 민경욱(인천 연수) 의원을, 전라경(비례) 의원이 맡았다. 민 의원 역시 친박계로 통한다. 이처럼 당내 핵심 요직을 모두 '친박' 인사로 채워 당내에서는 '탕평'의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황 대표는 ▲정중섭 중앙연수원장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신보라 중앙청년위원장 ▲김성태(비례) 디지털성장위원장 ▲이은재 대외협력위원장 ▲강석호 재외동포위원장 ▲임지아 노동위원장 ▲이진복 삼일특별단장 ▲이현승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선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평화·정의당 첫 만남부터 5·18 신경전

취임 인사차 예방...망언 제명·박 탄핵 부정 놓고 설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일 상견례 자리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모독 망언'과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발언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정 대표와 이 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평화당 정 대표는 "황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이른바 '5·18 망언' 사태에 대해 고심했

지만, 슬기롭게 처리해달라. 전대 이후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두환 시절 광주시민을 짓밟았지만 한국당은 이후 새롭게 태어난 당으로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당과 대적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석한 유성열 의원은 "황 대표가 경선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당 대표가 되면 골치 아프

겠구나' 생각했다"며 "미래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가는 탄핵부정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문맥 전체를 보면 미래로 가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꾸 과거에 붙들리는 정책과 행정을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끌어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념적 편향성을 갖지 않고 대외적으로 큰 뜻을 펼쳐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는 더욱 노골적인 설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전대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탄핵 수용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5·18 망언에 대해서도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동안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 "10분간 연설 감사드립니다"면서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조작 사건과 김경수가 한 것에 대한 비교는 어떤가"라고 역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의당에 처음 찾아와서 같이 할 말씀은 일 중 두루깡을 말씀하시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한자릿수로

리얼미터 조사... 이명박 보석 반대 60.3%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 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 포인트 내린 38.3%, 한국당 지지율은 2.0% 포인트 오른 28.8%로 각각 집계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9.5% 포인트였다. 민주당은 3주 동안의 완만한 오름세가 꺾여 30% 후반대로 내려앉았고, 한국당은 2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40%

포인트대에 달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해 11월부터 10% 포인트대로 축소됐고, 지난달 초 10% 포인트 아래로 줄었다가 다시 확대된 바 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이 같은 상승세가 2·27 전당대회 효과와 함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에 따른 반사효과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6% 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 4주 연속 50% 선을 전후한 등락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38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 ★ [서구]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2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 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